박준영 전남지사·안종운 농촌공사 사장·한준호 한전 사장·박광태 광주시장(왼쪽부터)이 지난 1월 19일 나주 공동혁신도시 합의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시·도민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나란히 박수를 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개발중심축 "옮기자" "못 옮긴다"

광주시-전남도 공동혁신도시 갈등기류

새 산업단지 입지·공개 놓고도 신경전
'상생 발전' 합의속 개발효과 이해 대립

공공기관 이전으로 나주에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개발중심축 변경과 광주·전남 접경지 건설이 추진중인 신 산업단지를 놓고 시·도간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타 지역과 달리 유일하게 시·도간 상생 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를 하나로 모으는 나주 공동혁신도시 조성에 합의, 그동안 가장 빠른 사업진척도를 보여왔다.

이 같이 '상생 발전'이라는 대명제에는 합의했으나 공동혁신도시 입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펴면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3일 박광태 광주시장이 민선 4기 취임사에서 나주 일원에 조성될 공동혁신도시와 광주 사이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계획〈본보 4일자 1면〉을 밝히자 전남도는 시·도간 약속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불쾌해하는 반응이다.

시·도지사가 새 산단 조성에 대해 합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방적 공개'라는 지엽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데는 혁신도시나 산단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개발 효과 흡수라는 측면에서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기 때문이다. 양 시·도간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혁신도시 개발중심축 이견**=광주시는 최근 전남도에 공동혁신도시 개발 중심축을 당초 합의안인 동악리 일원에서 광주 쪽으로 약 2㎞ 이동한 나주시 산포면 지석강 주변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세계적으로 도시 건설이 강이나 수변을 끼고 건설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석강 주변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개발 면적을 200만평에서 250만평 수준으로 늘려달라는 도의 요구를 시가 수용할 예정인 만큼 개발 중심축은 도가 양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혁신도시 중심축이 광주에 가까울수록 혁신도시 건설 효과가 광주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중심축을 옮길 경우 개발예정부지(380만평) 중 상당 부분의 변경이 불가피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나주시도 이미 금천면 동악리 일원을 개발중심축으로 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축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에 혼선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 공동혁신도시 중심축 이동 요구에 대해 박준영 전남지사는 완곡하지만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박 지사는 지난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중심을 광주쪽으로 조금 옮겨 무슨 효과가 있겠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새 산업단지 조성**=박광태 광주시장은 4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광주와 공동혁신도시 사이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약속을 전남지사와 했다"면서 "광주와 전남이 공동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인접한 담양·장성·나주·화순을 아우르는 경제공동체인 '신 광주 메트로폴리탄'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혁신도시 기존 예정지와 광주시 변경요구안

그러나 전남도는 새 산단 조성사업이 시·도간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계획인 만큼 기본준비절차를 마친 후 공동발표하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 산단 조성의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광주와 공동혁신도시의 중간지점인 점 ▲부품관련 산업 육성 ▲평동산단과의 연계효과 등을 고려하면 '광주시 남구 대촌~나주 남평·산포 일원' 보다는 '광산구 동곡~나주 노안면 일대'가 유력하다는 것이 광주시측 분석이다.

전남도는 새 산단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새 산단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단이 광주가 아닌 나주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혁신도시 중심이동과 새 산단 조성 복안이 현실화되면 박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나주·화순·담양·장성을 아우르는 인구 250만 명의 신 광주메트로폴리탄 건설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며 주목하고 있다.

도는 시가 공동혁신도시의 중심축을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에서 광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석강 쪽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한 것과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신 산업단지를 조성 계획을 양자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혁신도시 건설의 '과실'을 독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며 경계하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새 각료 인사청문회 먹구름

'코드 개각' '경제실정' 치열한 공방 예상

빠르면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7·3 개각' 인사청문회의 기상도는 '온통 흐림'이다.

이번 청문회는 주로 국무위원 후보자의 '개인 검증'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청문회와는 양상이 사뭇 달라 보인다. 경제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의 총체적 실정 여부와 '코드개각' 논란이 주전선을 형성하면서 여야간에 물러설 수 없는 정치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총력 방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상임위 또는 의원별로는 '야당 못지 않은' 공세를 가할 개연성도 적잖다. 개각을 둘러싼 반발기류가 일단 침전돼 있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청문회를 계기로 분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 '코드개각' 추궁**=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초점은 '코드개각' 논란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 비전문가인 김 전실장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측근 인사만을 중용하는 코드개각의 전형이라며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가 정책적 성향상 교육 평준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경제부총리 '경제실정' 논란**=권오규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주제는 경제실정 논란이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주요 경제정책의 산파역을 맡아온 권 후보자를 상대로 부동산값 폭등, 경제양극화 심화, 성장률 저하 등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론을 집중 추궁한다는게 재경위 소속 야당의원들의 입장이다.

특히 권 내정자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매각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권 내정자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질책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분배론, 국토균형발전 등을 문제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리당 재경위원들은 크게 문제삼을만한 구석이 없다고 보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주요 현안에 대해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다는게 여당의원들의 평가다.

◇**예산처 장관·국세청장은 대체로 '무난'**=장병완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장 후보자의 경우 특별히 논란을 벌일만한 쟁점이 형성돼있지 않아 예산편성의 '톱다운'제도의 정착여부와 국가재정법 입법 등 정책질의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도 실무에 밝고 정책 추진능력이 탁월한데다 개인 자질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 순탄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전 조율?

지난달 28일 노대통령-김의장 독대 대화내용 관심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우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고 자연스럽게 당청관계를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에 앞서 비공개로 이뤄진 김 의장과의 만남에선 훨씬 더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7·3 개각과 관련해 사전에 모종의 의견교환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기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김 의장이 당내 반발 움직임을 조기 진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와 김 의장측은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노 대통령과 김 의장의 회동자리에서 개각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개각논의는 청와대 회동 이후 김진표 부총리의 사의 표명때 당이 알게됐다"며 "이후 김 의장은 당의 부정적 의견을 청와대에 알리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당·청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권 존중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김 의장 측이 개각 논의 여부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나선 것은 '사전교감설'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각에 대한 당내 반발기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개각에 대해 사전교감을 한 것으로 알려질 경우 김 의장의 당내 입지가 흔들릴뿐 아니라, 당청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인지 우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동의 대화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우 대변인에 따르면 김 의장은 단독회동 첫머리에서 5·31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한 뒤 "의원들이 상심해 있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다"며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직을 맡았는데 최대한 당을 수습해 참여정부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의장직을 맡겠다고 결단하신 것을 높게 평가하고, 존중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대통령은 "당을 도와달라"는 김 의장의 요청에 대해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중을 내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노 대통령에게 탈당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뒤 "탈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노 대통령은 "탈당은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